

전민일보(2011.10.31), 1면 기사에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브리핑, 소방예산, 지방재정 희생강요한다(이슈브리핑 61호)와 관련하여 전민일보 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이슈브리핑의 목적은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이 1.8%에 불과한 반면 98%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를 중점 강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소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본 이슈브리핑에서 부제로 달았던 것처럼 소방력이 전북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중에 전민일보가 지적한 <표 9>의 해석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없이 무리한 해석을 하여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점을 인정하고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소방력지수는 전국 소방력의 규모에 따라 소방 대응 정도를 가름하는 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인구과소지역이 많고 지형상 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상 중요한 것은 소방차량과 구급대 등 기동성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 9>에서 보시듯이 전북의 소방력은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소방차량당 인구수(5,375명), 구조대당 인구수(185,451명), 구급대당 인구수(28,099명), 주민 1천명당 구급대이용자 수(28명) 등에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당 인구수는 비수도권 지역 중에 전남, 충북 다음으로 전북의 부담이 높은 상태이고 소방안전센터당 인구수의 경우는 충북, 경남, 전남 다음으로 전북 지역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이슈브리핑은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소방공무원의 증원 및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여 더 양질의 소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었습니다.

본 이슈브리핑은 소방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 넘기는 상황을 분석하고 소방 서비스 제공에 국가가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소방서비스 자체가 수도권과 비 수도권간 차이가 극명하여 국비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슈브리핑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데이터의 해석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강조하여 설명을 덧붙이지 못하였다는 작성상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향후 이슈브리핑 작성에 있어 설명과 해석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 이슈브리핑의 출간 전에 내용을 충분히 점검하는 자체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